함평군·나주시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각각 2,952만원·2,898만원 등 '올해 수준으로'

나머지 광주·전남 지방의회도 동결 가세할 듯

함평군의회와 나주시의회가 잇따라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한데 이어 광주·전남 타 광역·기초의회도 가세할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나주시의회는 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내년도에 올해와 같은 2천952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정수당 1천632만원)의 의정비를 받게된다.

함평 군의회도 지난달 30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2010년 의정비를 올해 금액으로 묶기로 했다. 함평 군의회의 내년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과 월정수당 1천578만원 등 총 2천898만원이 지급된다.

나머지 20개 시·군 기초의회도 아직까지 의정비 인상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있지만, 의정비를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도의회도 최근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 문제를 논의를 시작하기 시작했으며, 조심스럽게 동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와 자치구 기초의회에서도 의정비 동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지난해 14.7% 인상한 4천855만원(월정수당 3천055만원·의정 활동비 1천800만원)이었다.

또 광주 5개 기초의회의 의정비도 올해와 같은 수준인 2천900만원에서 많게는 3천300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동구는 3천108만원, 서구 3천58만원, 남구 2천911만원, 북구 3천116만원, 광산구 3천296만원 등이었다.

이명자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내년도 의정비와 관련해 아직 의원들과 공식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으나,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동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미 의정비 동결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책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의회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서울과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5곳이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기초의회도 전국 230곳의 21.7%인 50곳이 동결을 선언하거나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최권일기자 cki@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부의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 소방관이 산불 전개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LA 산불 통제불능…주민 대피령

1만2천여가구 위협…4억 2천만㎡ 불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북부의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엿새째 계속되면서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라카냐다 부근 앤젤레스 국유림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이 서쪽과 북동쪽으로 계속 번져 31일 오후 5시 현재 10만5천여 에이커(4억2천500만㎡)가 불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지역 주변의 1만2천여 가구가 여전히 산불 위협을 받고 있고, 적어도 6천600 가구에 대해 강제 대피령이 내려져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소방당국은 특히 관측소와 TV 및 라디오 방송 등의 송신시설이 있는 윌슨산 정상으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주변 지역의 잡목을 제거하고 대형항공기를 동원해 진화제를 살포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소방당국은 특히 동포와 우리 상사 주재원이 많이 사는 라크라센타와 라카냐다 지역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맞불을 놓아 잡목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대피령이 해제되지 않는 등 주민들의 산불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 새벽 3시께 라크라센타 일부 지역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부랴부랴 대피소나 인근 친지 집으로 피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간부회의 확 바뀐다

실·국장 보고 위주→담당 사무관 참여 토론·대안 마련

광주시의 간부회의 방식이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토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는 '열린 전문간부회의'로 바뀐다.

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고 위주로 진행 온 간부회의 방식을 벗어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전문화·세분화한 전문간부회의로 진행키로 했다.

우선 기존 실·국장이 참석해온 관례를 깨고 담당 사무관까지 회의 참여폭을 넓히는 한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석자들이 현안업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 토론하는 소통중심 회의가 진행된다.

또 실·국장이 참석해 보고해온 기존 화요 간부회의의 경우 첫 째주는 행정부시장이, 셋 째주는 경제부시장이 각각 주재하는 기능 중심의 회의방식으로 변경한다.

이같은 방안은 박광태 시장이 시정변화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관을 회의에 참여시켜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방식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대규모 댐 건설·우정 민영화·예산 재검토

日 민주, 자민당 사업·정책 속속 제동

일본 민주당 정권 탄생이 임박하면서 50여년간 계속돼 온 자민당 정권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 속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반세기 전부터 추진돼 3천억여원이 투입된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이 일단 중지됐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핵심 개혁으로 꼽히는 우정(郵政)민영화 작업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내년도 예산 편성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1일 홍수대책으로 1952년부터 추진돼 온 '얀바댐' 건설 사업 추진을 일단 보류했다. 이달 실시할 예정이었던 본공사 시공업자 입찰을 백지화한 것이다.

고이즈미 개혁의 상징인 우정민영화도 전기를 맞았다.

우정민영화는 거대 공룡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10월부터 지주회사인 일본우정과 산하의 우편사업회사, 우편국회사, 유초(郵貯·우편저축은행), 감포(簡保·보험회사) 등 4개사로 분사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식 매각을 동결하는 법안을 사민당, 국민신당과 협의해 내달중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이 제출되면 새 여권 다수의 찬성을 통과가 확실시된다.

내년도 예산도 전면적인 재수술이 임박한 상태다.

그동안 각 성청(省廳·부처)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3조5천800억엔 증가한 92조1천300억엔에 달했다. /연합뉴스

인도, 신종플루 감염자 사망률 1위

인도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인도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집계된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3천987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00명에 달해 사망률이 2.5%에 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21일까지 집계한 전 세계 평균 사망률 0.9%를 크게 웃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인도 보건국의 S.K. 스리바스타바 박사는 "인도의 신종플루 사망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아주 높다. 그러나 이는 확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사망률이며, 검사대상까지 모수에 포함하는 다른 나라와는 산출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